

전주 도도동 정원식물 지원센터 윤곽

시,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열고 두산건축사사무소 작품 당선작 선정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 인근에 조성되는 정원산업 클러스터의 시작을 알릴 정원식물 지원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시는 기존 호동골 양묘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해 조성되는 정원식물 지원센터의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두산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선작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이해 △매치 및 동선계획 △공간계획의 적합성 △환경친화적 양묘시설을 위한 전략 등의 측면에서 경쟁작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원식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 기능을 높이기 위한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형 정원으로 △아로마가든 △플레이가든 △사운드가든 △이벤트가든 △마인드가든 조성 등 꽃의 생육특성을 고려한 외부공간을 계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초 구상한 기본계획과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5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정원식물 지원센터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정원식물 지원센터는 2만6124㎡의 부지에 △스마트 유리온실 △관리동 및 방문자센터 △자동화비닐하우스 등 사물

인터넷(6G) 기반 스마트 양묘시설 △온실정원카페 및 교육실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도도동 항공대 인근 34만㎡ 부지에 총 1200억 원을 투입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소제 생산에서부터 유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정원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집적되는 곳으로, △정원식물소재 생산구역 △정원산업 혁신구역 △정원박람회 구역 △정원 휴양 및 관광 구역 △정원소재 유통단지 구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민생활력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지역경제 활성화’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구, 산업·경제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형 상생일자리 및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역화재인 '전주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구는 신년브리핑을 통해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한 산업·경제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신성장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ICT융합산업 기반구축과 전문인력양성으로 디지털경제 기반생태계 조성 △지역기업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강화 △사회연대경제·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이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한 글로벌 산업구조에 대응해 신성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발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발전을 견인할 수소·탄소·드론·금융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힘쓰고, 주력산업의 발전 방향과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수소에너지 등장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산업 분야 발굴과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주력해온 탄소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친환경복합산업단지(57만㎡)와 탄소 국가산업단지(65만㎡) 등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가동해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또 ICT융합산업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가상융합기술(XR)과 AI산업 육성을 위한 VR·AR제작거점 및 스마트미디어센터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XR·메타버스·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기업협업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경제 기반을 구축한다. 또 올 상반기에는 전주형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이 운영되고,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40억원을 투입해 지역상권과 연계한 스마트주차솔루션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첨단벤처단지 혁신창업허브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산학융합플라자 △중소기업연수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5대 성장거점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또, 총 1662억 원 투자와 232명 고용을 목표로 한 '전주형 상생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제가 도입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청년소통공간인 '청년청' 구축을 포함해 △오랜지플래닛 △미래창의교실(퓨처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2000 △청년취업 등 전주형 청년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방역관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및 경영을 안정화시키는데 힘쓴다. 또 특성화 시장 육성과 상업가 주차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도 키울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과 더불어 전주시사랑상품권을 24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 온라인 결제 연계 등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문화공간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성장·유통지원센터인 '사회연대 상생마당'도 조성된다.

이밖에 시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체공공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제해결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후백제 역사문화권 포함 법안 개정 뜻 모아 달라”

김승수 전주시장, 민선7기 4차년도 제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서 건의

전주시가 전북 13개 시·군에 후삼국시대 주역이었던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대한민국 역사로 기록·등록하는 법 개정엔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 촉구를 위한 뜻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17일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장이 지난달 김승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방)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후백제 45년의 역사는 왕도 전주를 비롯해 견훤왕이 활동하였던 지역에 그 흔적이 남아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는 현재의 전북지역이 국가의 중심이었던 후백제와 견훤대왕을 잊고 싶었다”면서 “비록 늦었지만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인정받아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울 때이며, 우리 전북 역사의 한 축이었던 ‘후백제’가 당연한 고대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후백제의 중심영역이었던 전북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복원을 위해 아직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군의 협의회 추가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선수 소득세 고율제 납 개선을 위한 입법을 함께 건의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에게 책의 도시 전주에 조성된 이색도서관들과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는 현재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탈라 등 6개 권역과 지난해 12월 포함된 중앙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포함한 8개 권역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성한 국가이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후백제는 이 법안 대상 권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7개 지자체(전주·문경·논산·상주·안주·진안·장수)는 지난해 11월 26일 후백제의 왕도 전주에서 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역사문화

권정비법에 후백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후백제 문화권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인 김성주·김종민·안호영·임이자 의원이 주축하고 후백제학회가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열렸으며, 1월 28일에는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김종민·김승남·김윤덕·김수홍·신영대·이원택·안호영·윤준병·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전주만의 역사 문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문화 중 하나”라며 “이제는 기존 8대 문화권에 후백제의 역사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후백제의 역사문화권을 골고루 기록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돕기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과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출연금 2억 원과 고용유지 특례보증재원 4억6000만 원을 출연해 올해 소상공인들에게 총 6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또 기간 추진한 특례보증사업 이차보전을 위해 올해 4억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대출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의 추가 지원을 위해 올해 ‘고용유

지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변경함으로써 46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을 확보,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주시 및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업체에는 최대 4000만 원 대출자금 보증과 함께 5년간 본인부담 1%를 제외하고 최대 5%까지의 이차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연 1% 수준이다.

상황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과 함께 초기에 원금상환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한 거치상환 방식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879점(신용등급 기준 3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 신청은 전북 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련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